

국방대 지방 이전 원칙대로 논산으로

국가균형위의 ‘행정도시로 이전’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배치*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정부는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수도권 집중 및 과밀 해소와 함께 지역에는 성장 촉진 거점 형성이라는 뚜렷한 정책 목표와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에선 전국의 176개 기관 중 41개는 행정도시로, 나머지 135개는 전국의 기타 지역으로 이전이 결정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성장 거점 형성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집단 이전토록 하고 있다. 다만 충남지역 내 행정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6개 기관은 지역 연고와 유관 기관 인접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여 클러스터 형성 등 지역 성장 거점 형성을 촉진토록 했다.

충청남도과 중앙의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체결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행 기본협약서’에 의하면 행정도시 이전 대상 기관의 입지 선정은 ‘행정도시 건설 기본 계획’에 따라, 그리고 6개 개별 이전 기관은 ‘혁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 (혁신도시건설촉진법)의 절차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것을 명시했다. 개별 이전 기관의 하나인 경찰대학교는 경찰종합학교가 있는 아산지역으로, 중부 발전 및 서부 발전 본사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보령 및 태안지역으로 이전이 결정됐다. 다만 국방대학교의 경우 기본 계획에서 각 군 본부가 있는 충남지역의 원칙에 따라 논산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도시로의 이전을 희망하면서 아직

*이 글은 조선일보 (2007. 5. 4)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논산지역은 3군 본부뿐만 아니라 육군훈련소 및 육군항공 학교 및 군수사령부 등이 인접되어 있고, 5~15분 거리 내에 호남고속철도 남공주역과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갖춰진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일 국가균형위원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국방대학교의 행정도시 이전 안건을 상정하여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방대학교의 충남 이전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이전 대상 기관들의 반발을 잠재울 논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에 의한 충남지역의 이전 대상 지역에 행정도시도 포함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하여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확정고시’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확정고시 후속 조치’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의 확정고시’에서는 국방대학교는 행정도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물론 객관성을 띤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의 민간전문가들마저 국방대학교의 행정도시 이전 시도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존 계획의 치명적인 결함이나 예상치 못한 여건 변화 등과 같은 충분한 이유와 설득 과정도 없이 정책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무리한 국방대학교 행정도시 이전 시도를 중단하고 기본 방향과 원칙대로 논산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